

# 의료 민영화에 맞선

# 병원 노동자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건의료노조가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오는 6월 24일 경고파업을 포함해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한다.

또 지난 6월 10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부대사업 확대)과 영리 자회사 허용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7월 2차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6월 5일 현재 62개 지부, 조합원 3만여 명의 이름으로 중앙노동위원회와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 중 9개 지부에 대해서는 이미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세 달 넘도록 교섭에 나오지도 않은 “사측의 교섭태도를 인정한다” 하며 쟁의권을 인정했다.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가 한창인 가운데 고려대의료원 등에서는 보고대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정상화’에 맞선 투쟁도 벌어지고 있다. 경희의료원 지부는 사측의 감원 계획에 맞서 본격적인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6월 16일에는 “구조조정 박살, 의료 민영화정책 폐기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원자력의학원 지부는 정부의 인력감축과 진료기능 축소 계획에 맞서 농성을 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도 오는 19~23일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고 27일 하루 파업을 벌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의 고삐를 당길 때다.

일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이 이날 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서울대병원 분회는 비정규직 해고에 맞선 투쟁을 적극 조직하고 있다.

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사회적 지지는 매우 높다. 40만 명이 서명에 동참했고 전국 곳곳에서 벌어진 서명전은 높은 지지를 받았다.

2백50여 개 사회단체가 함께 만든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과 지역 대책위도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권역대책위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다.

## 부대사업, 영리 자회사 전면 허용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다. 다섯달 만에 40만 명이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영리 병원 추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노골적인 방식 대신 부대사업 확대, 영리 자법인 설립 같은 꼼수를 쓰고 있다. 이런 조처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한 제한 없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단지 ‘형평성’을 위해 ‘의료법인’에도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시행령을 보면 “의료기관을 개설한 [모든]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

▶ 뒷면으로 이어짐

# 병원 노동자 파업

# 정당한 권리이자 정의로운 파업

정부와 병원 사측은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려 하면 '철밥통'이라 비난하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문제를 두고 싸우려 하면 '정치 파업'이라고 비난한다. 노동자들은 뭐가 되든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는 의료비 폭등, 안전 위협 같은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이다.

게다가 의료 민영화는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병원이 수익성에 매달릴수록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인건비를 줄이려는 시도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민간 비영리 병원 간호사 시급이 27달러일 때 영리 병원 간호사 시급은 25달러였다. 비영리에서 영리로 전환한 병원들은 대개 인력을 감축했다.

지금도 한국의 간호 인력은 선진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은 사실상 영리 병원 허용이다.

국의 30퍼센트 정도밖에 안 된다.

이처럼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강도가 강화될수록 환자의 안전은 위태로워진다.

“간호사가 맡아야 할 환자가 한 명 더 늘어날 때마다 환자의 입원 30일 내 사망률은 7퍼센트 증가하고, 간호사의 탈진은 23퍼센트, 업무 불만족감은 15퍼센트 늘어난다고 알려

져 있다.”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노동자 권리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투쟁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의료 민영화에 맞선 투쟁이자 공공부문 '정상화'에 맞선 투쟁이기도 하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원자력의학원 등 공공병원 지

부들도 공공부문 '정상화'의 대상으로 올라 있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많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할 수 있다.

또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월호 참사로 터져 나온 대중적 분노를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선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지난해 철도 파업처럼 말이다.

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함께 참가합시다!



6월 24일 보건의료노조 경고 파업 및 1차 상경투쟁

6월 27일 의료연대본부 경고 파업 및 1차 상경투쟁

돈보다 생명, 돈보다 안전!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를 위한 행진 생명과 안전의 물결

일시 : 6월 28일 (토) 오후 2시 40분 장소 : 서울역에서 청계광장까지 행진 (생명의 흰 옷, 안전의 노란 옷을 입고 '생명'과 '안전'을 요구하는 행진을 합니다.)

### ▶ 앞면에서 이어짐

그럼에도 이전 정부들이 부대사업 허용, 비급여(비보험) 허용 등으로 영리 추구의 길을 열어 줬던 것이다.

그런데 대학병원들은 이런 법조차 어겨가며 환자들을 대상으로 돈벌이를 해 왔다. 정부는 이를 못 본 체하다가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려 한다.

정부는 의료법의 부대사업 조항을 내버려 둔 채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에서 대폭 허용하려 한다. 이런 조치가 가능한 것은 의료법에 복지부장

관이 부대사업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범위를 무의미하게 할 정도로 많은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에 허용된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자회사)”은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이다.

현행법조차 여기는 시행규칙 개정안과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당장 폐기돼야 한다.

### 추천 소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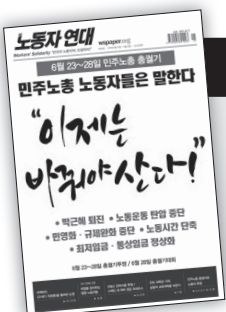


##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장호중 지음, 3,500원, 100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mail@workersolidarity.org

20권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 노동자 정치 신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